

제439회 국회
(정기회)

국방위원회 회의록

제 7 호

(임시회의록)

국회사무처

일시 2026년10월14일(수)

장소 국방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2026년도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 추가의 건
- 이재명 정부의 DMZ 북한 추정 지뢰 참사 축소·은폐 의혹 진상규명 및 부상 장병 예우·지원 촉구 결의안(나경원 의원 등 105인 발의)(의안번호 2221705)(추가)
- 군사분계선(MDL) 이남지역에서의 북한 지뢰 폭발사고 규탄 결의안(진성준 의원 외 160인 발의)(의안번호 2221776)(추가)
- 군사분계선(MDL) 이남지역에서의 북한 지뢰 도발 규탄 결의안(대안)(추가)

상정된 안건

- 2026년도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 추가의 건 1
-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 이재명 정부의 DMZ 북한 추정 지뢰 참사 축소·은폐 의혹 진상규명 및 부상 장병 예우·지원 촉구 결의안(나경원 의원 등 105인 발의)(의안번호 2221705) 2
- 군사분계선(MDL) 이남지역에서의 북한 지뢰 폭발사고 규탄 결의안(진성준 의원 외 160인 발의)(의안번호 2221776) 2
- 군사분계선(MDL) 이남지역에서의 북한 지뢰 도발 규탄 결의안(대안) 2

(10시33분 개의)

○위원장 진성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7차 국방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국정감사에 필요한 추가 증인 출석 요구를 진행하고 결의안을 처리하겠습니다.

1. 2026년도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 추가의 건

○위원장 진성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 추가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증인 신청을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과 협의한 결과 일반증인 두 명을 추가로 합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반증인 명단은 끝에 실음)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이재명 정부의 DMZ 북한 추정 지뢰 참사 축소·은폐 의혹 진상규명 및 부상 장병 예우·지원 촉구 결의안(나경원 의원 등 105인 발의)(의안번호 2221705)

3. 군사분계선(MDL) 이남지역에서의 북한 지뢰 폭발사고 규탄 결의안(진성준 의원 외 160인 발의)(의안번호 2221776)

4. 군사분계선(MDL) 이남지역에서의 북한 지뢰 도발 규탄 결의안(대안)

(10시34분)

○위원장 진성준 다음은 위원장이 국회법 제77조에 따라 간사위원님과 협의해서 의사 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3건의 결의안을 일괄하여 추가상정합니다.

이들 안건에 대해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해 주셨습니다.

국정감사 기간 동안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임종득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임종득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법률안심사소위원회의 임종득 소위원장입니다.

총 7인의 여야 위원으로 구성된 우리 법률안심사소위에서 금일 오전에 진행한 결의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나경원 의원 등 105인이 발의한 이재명 정부의 DMZ 북한 추정 지뢰 참사 축소·은폐 의혹 진상규명 및 부상장병 예우·지원 촉구 결의안 및 진성준 의원 외 160인이 발의한 군사분계선(MDL) 이남지역에서의 북한 지뢰 도발 규탄 결의안 2건을 심사한 결과입니다.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에서의 북한 지뢰 폭발사고 규탄……

○위원장 진성준 이것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임종득 이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위원장 진성준 제가 발의한 것이 아래 거고……

○소위원장 임종득 제가 읽겠습니다.

군사분계선(MDL) 이남지역에서의 북한 지뢰……

○위원장 진성준 도발 규탄 결의안을 제안하기로 함.

○소위원장 임종득 도발 규탄 결의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이건 지금 오타자가 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군사분계선(MDL) 이남지역에서의 북한 지뢰 도발 규탄 결의안(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한민국국회는 군사분계선 남쪽 비무장지대에서 우리 군의 정상적인 수색로 개척 작전 중 북한군 지뢰 도발로 장병들이 중경상을 입은 이

번 사건을 강력히 규탄하며 향후 대한민국의 후속조치에 대한 모든 책임은 북한 당국에 있음을 확인하고 북한 당국에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 인정 및 사과,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며 대한민국 정부와 군이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DMZ 일대의 지뢰 탐지 및 점검, 장병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의 지뢰 도발에 대한 자위권 차원의 필요하고 단호한 대응을 사전에 해 줄 것과 국제연합·유엔군사령부 및 관련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북한의 재발방지와 군사적 도발 억제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아울러 대한민국 정부가 부상 장병들의 치료, 회복과 부상 장병 및 그 가족에 대한 충분한 예우와 지원을 위해 필요한 보훈·의료 및 후속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배부해 드린 결의안(대안) 제3항 후단 부분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해 전체회의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의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성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소위원회에서 합의하지 못하고 전체회의에서 논의하자 했던 안이 뭐냐 하면 그 3항의 후단이라고 하는 게 도발을 방지하고 조사를 지연시킨 군에 대한 책임도 국회 차원에서 진상을 규명하여야 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소위에서 충분히 논의하셨지만 여야 간에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전체회의에서도 저는 합의되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후단 조항을 빼고 나머지 합의된 것을 위원회의 대안으로 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일종 위원 반대합니다.

○위원장 진성준 반대하세요?

○성일종 위원 예.

○위원장 진성준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일종 위원 아니, 표결이 아니라……

이렇게 가시면 안 되지. 지금 결의안은……

○위원장 진성준 토론하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뻔한 얘기들인데.

○성일종 위원 아니, 잠깐만 위원장님……

○임종득 위원 발언권을 주세요.

○성일종 위원 간사님 먼저 하세요.

○위원장 진성준 임종득 간사 위원님, 발언 3분 드리겠습니다.

○임종득 위원 법률소위 위원장 임종득입니다.

오늘 우리 소위에서는 9시에 소위를 개최해서 2건의 결의안에 대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결의안에 대한 검토를 할 때는 시간을 좀 단축하기 위해서 진성준 의원이 제기한 결의안을 바탕으로 해서 나경원 의원이 요구한 안을 포함시키고 국민의힘에서 제기하고 있는 안들을 포함시키는 걸로 진행을 했습니다. 잘 진행이 됐습니다. 상당 부분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아까 발표도 했습니다마는, 북한의 도발 규탄 결의안으로 제목을 바꿨고요. 도발에 대한 부분들을 전부 다 반영시켰습니다. 도발이 확실히 동의가 됐기 때문에 북한의 사과와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요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 요구하는 자위권 차원의 단호한 대응까지를 포함시키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습니다.

문제가 됐던 부분이 크게 2개입니다. 3항 후단에 있는, 이 지뢰 도발과 관련해서 군이 대응했던 부분의 진상이 정확하게 국회 차원에서 규명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 하나였고, 4항에서는 우리 국민의힘에서 요구했던, 북한이 사과조차 하지 않는 이 상황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을 검토하는 부분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부분이었습니다.

논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양보를 해서 인도적 지원에 관련되는 부분들은 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마지막까지 3항에서 우리가 요구했던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 요구를 반대해서 소위 차원에서 합의가 되지 않고 전체회의에서 추가 논의하는 걸로 하였던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북한의 도발이 확실한 겁니다. 그런데 북한은 지금 사과도 하지 않았고 재발방지 약속도 안 하면서 도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도발은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질 겁니다.

이러한 차원의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국방부와 합참은 25사단 지뢰 사고와 관련해서 지뢰 몇 발 제거하고 난 다음에 '역사상 가장 강력한 대응을 했다'라고 할 정도의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지금 MDL을 이남으로 월선하는 북한의 행태, 거기에 대해서 정전 시 교전규칙을 제대로 적용 못 하는 우리 군에 대한 질책 그다음에 빈충 경계가 그 와중에 일어났습니다. 전방 군단뿐만 아니라 해병 2사단까지 빈충 경계 상황이 일어났는데 이 부분에 대한 책임 규명도 봐야 되는 거거든요. 다 연계가 돼 있는 겁니다.

1분만 더 주십시오.

○위원장 진성준 1분 드리겠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임종득 위원 예.

그다음에 이러한 부분들을 군에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서 정말 상응하는 단호한 대응을 하도록 국회 차원에서 요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이 결의안에 군에 대한, 이후 관련된 부분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자라고 하는 것조차도 담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북한이 잘못된 건 맞는데 그냥 우리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규탄하는 것으로 끝낼 거야'라고 하는 민주당의 주장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북한의 사과를 그리고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 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행동이 절대로 바뀌지 않을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이날 이후에 과연 북한의 행동이 바뀌는지를 두고 보십시오. 그게 뻔히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넣어서 우리 군의 생각과 대응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성준** 임종득 간사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 아닙니까? 더 따져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는 그러면 민홍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민홍철 위원** 임종득 위원님의 의견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다만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에서의 북한 지뢰 도발 규탄 결의안 내용은 북한 도발에 대한 규탄 내용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3항 후단은 두 가지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우리 군에 대한 책임을 묻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문언 자체가 ‘도발을 방기하고 조사를 지연시킨 군에 대한 책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도발을 방기했느냐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조사가 지금 안 돼 있고요. 또 하나가 조사를 지연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도 불명확한 개념입니다. 유엔사와 협조해서 충분히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걸로 지금 규명이 되고 있는데,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대북한 규탄 결의안에 이 내용을 넣기는 부적절하다.

다만 다른 절차, 예를 들어서 국정감사라든지 다른 절차에 의해서 우리 내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다. 그래서 그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의미에서 이 내용을 여기에, 규탄 결의안에 넣는 것은 부적절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성준** 감사합니다.

성일종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성일종 위원** 결의안을 내자고 하는 여당 위원님들 존중합니다.

그리고 이 결의안, 아마 상당 부분 수긍할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 안전들이 상충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임종득 간사께서 인도적 물자까지도 양보를 했다고 그러합니다.

그런데 이 북한이 절대로, 변하겠습니까? MDL을 넘어서 남쪽에 지뢰를 매설한 이 상황은 결코 앞으로 절대로, 우리가 강력하게 대응을 하지 아니하면 막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군이 그동안 어떻게 대응을 했어요? GP·GOP 여기에서 육안과 TOD, 모든 과학적 장비를 동원해 가지고 이 관측 자료가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근간에 일어난 일입니까? 그 전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이 어떻게 대응을 했어요? 지형 변화라고 그래서 국민 다 속였습니다. 남측의 MDL을 넘어와 가지고 대한민국 땅에 지뢰를 매설했는데 이걸 지형 변화라고 하면 국민이 알아듣겠습니까?

또 북한이 국경 요새화를 한다고 하는 이 용어를 우리 국방부장관과 실무자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막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군을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일주일 후에 현장조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 일자별로 보니까 이틀씩 부상 병사들 챙기고 이런 것들 넣었던데, 군이 이번 사태를 바라보면서 정말로 이 조사를 통해서 군의 점검을 하고 국회가 나서지를 않으면 절대로 제가 볼 때, 제대로 대응을 할 수가 있을지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단호한 대응을 해야 되는 것에 앞서서 우리 군과 함께 같이하자고 하는 임종득 감사의 제안이야말로 여당이 못 받을 이유가 없다. 그래서 결의안은 결의안대로 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와 또 함께 병행하면서 우리 군이 바로 서고 또 경각심을 갖게 하고 국회가 국민이 쳐다보고 있는, 우려하고 있는 상황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당 위원님들이 좀 더 대승적 견지에서 이 부분을 받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이렇게 되지 않고 결의안만 한다고 그러면 여당은 정치적인 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당으로서의 단호한 의지를 표명하는 데 야당도 동의했다. 그러면 국민이 바라보는 야당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당이 들러리 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결의안은 결의안대로 내면서 또 군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와 경각심을 국회가 주자는 이 결의안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진성준 존경하는 박선원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박선원 위원 사실 이건 형용모순이지요. 북한 지뢰 도발을 규탄하는 결의안이잖아요. 그 내용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거기다가 우리 군의 도발 방기, 조사 지연 책임을 여기다가 넣는다는 건 말이 안 맞지요.

내일 아침에 당장에 김여정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북한인민군 총참모부장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대한민국 규탄 결의안에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책임 인정을 촉구하는 게 들어가 있다고 조롱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 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는 것 당연하고요, 그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언제 도발을 방기했습니까? 도발을 방기하지 않기 위해서, 현장 확인을 위해서 수색로 개척 작전을 했고 바로 뒤 이어서 유엔사도 들어갔지 않습니까? 조사 지연을 누가 시켰어요? 일정대로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미 앞서 존경하는 민홍철 위원님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우리가 국방부에 대해서 또 하실 말씀이 충분히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종합감사 때 국방장관에게 주의 촉구를 하시든, 아니면 진상규명을 똑바로 다시 한번 하자 이런 말씀은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뢰 도발 규탄 결의안에 우리 군이 도발을 방기했다고 해 가지고 북한이, 김여정이, 인민군 총참모부가 우리 군을 우리가 사용한 우리 문장을 이용해서 조롱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성준 이렇게 같은 얘기들 반복하실 것 아니고요. 이견이 있으시면 그 조항을 뺀 나머지를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는 문제를 표결하고자 합니다. 표결을 정 원치 않으시면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의 뜻을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고 합의 처리하겠습니다.

○성일종 위원 합의 처리가 아니지요.

○위원장 진성준 그러면 표결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성일종 위원 아니요. 잠깐, 잠깐. 표결에 반대하고……

○강선영 위원 3항을 그러면 어떻게 빼겠다는 거야.

○임종득 위원 우리 표결에 반대합니다.

○성일종 위원 공식적으로 표결 안 해.

(일부 위원 퇴장)

○위원장 진성준 의사일정 제2항 나경원 의원 등 105인이 발의한 이재명 정부의 DMZ 북한 추정 지뢰 참사 축소·은폐 의혹 진상규명 및 부상 장병 예우·지원 촉구 결의안과 의사일정 제3항 본 의원 외 160인이 발의한 군사분계선(MDL) 이남지역에서의 북한 지뢰 폭발사고 규탄 결의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서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소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수정·통합한 의사일정 제4항 군사분계선(MDL) 이남지역에서의 북한 지뢰 도발 규탄 결의안(대안)을 위원회의 대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결의안에 대한 체계·자구 정리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

일반증인 명단

일반증인(2인)

성명	직업	요구 위원	출석일 및 관련 피감기관	비고
신상균	글로벌국방연구포럼 위원	천하람	10. 26.(월) 종합감사	
신익현	LIG디펜스&에어로스페이스 대표이사			

○출석 위원(14인)

강선영 김민석 김병기 김병주 김성희 민홍철 박선원 성일종 송영길 임종득
진성준 천준호 천하람 황명선

○청가 위원(1인)

유영하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공춘택
전문위원 문성환